



해양수산 전국포럼 충남세미나

해양공간계획과 해양환경보전

남정호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연구위원

2017. 11. 6. 충남연구원 대회의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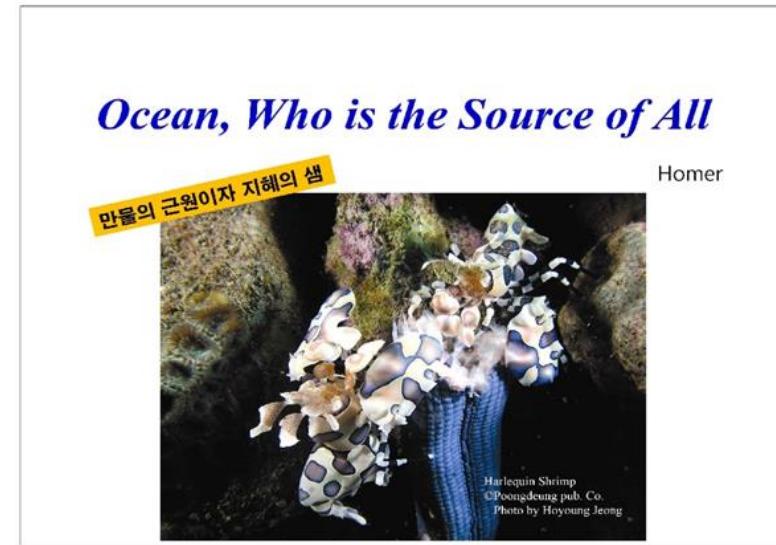
주최·주관 | 해양수산 전국포럼, 충남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후원 | 충청남도, 해양수산부, 지역발전위원회

해양수산
전국포럼
충남세미나

해양공간계획과
해양환경보전

CONTENTS

- 국내외 동향
- 추진여건
- 추진방향
- 충남의 도전 성공을 기원하며



Key Words for Chungnam SD

- ✓ MSP(해양공간계획)
- ✓ Ecosystem Services(자연혜택)
- ✓ Social Capitals(사회자본)
- ✓ Resilience(레질리언스)

I. 국내외 동향

연안해양, 경제 사회 생태적으로 중요 (남정호, 2011; 2014)

- 인구 친인연 이상 대형 도시(메가시티)
- 전지구 인구 60% 거주 (Martinez et al., 2007)

- 이류 해역의 68% 채굴 (Cortezzo et al., 1997)

- 모역 물질의 77% 육상기반 (GESAMP, 1990)

- 기후변화로 인한 해안 침식(Nam, 2017)
- 인류의 해양 생태계 영향 증가 (Halpern et al., 2008)

해양수산 전국포럼 충남세미나

I. 국내외 동향

고밀도, 지속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은 개발압력으로 발전잠재력 악화

A: Cumulative Impact Scores

Category	Score
Very Low Impact	0.0 - 0.4
Low Impact	0.5 - 0.9
Medium Low Impact	1.0 - 1.4
Medium High Impact	1.5 - 1.9
High Impact	2.0 - 2.4
Very High Impact	2.5 - 3.0

B: Coastal Development Pressure

Year	Population	Coastal Area	Marine Resources	Wetland	Arable Land	Forest	Water Extraction	Total
2000	45.7	10.7	7.1	0.2	1.6	2.1	0.1	52.1
2010	50.0	21.8	4.0	2.7	4.0	3.0	7.0	64.7
2015	53.0	26.0	7.5	1.1	2.4	2.8	1.1	74.0

C: Coastal Development Pressure Index

D: Coastal Development Pressure Index

E: Coastal Development Pressure Index

F: Coastal Development Pressure Index

G: Coastal Development Pressure Index

H: Coastal Development Pressure Index

I: Coastal Development Pressure Index

J: Coastal Development Pressure Index

K: Coastal Development Pressure Index

L: Coastal Development Pressure Index

M: Coastal Development Pressure Index

N: Coastal Development Pressure Index

O: Coastal Development Pressure Index

P: Coastal Development Pressure Index

Q: Coastal Development Pressure Index

R: Coastal Development Pressure Index

S: Coastal Development Pressure Index

T: Coastal Development Pressure Index

U: Coastal Development Pressure Index

V: Coastal Development Pressure Index

W: Coastal Development Pressure Index

X: Coastal Development Pressure Index

Y: Coastal Development Pressure Index

Z: Coastal Development Pressure Index

(Halpern et al., 2008)

(Nam & Choi, 2017)

해양수산 전국포럼 충남세미나

I. 국내외 동향

계획적 해양공간관리 : 10년 동안 MSP는 지속가능발전 핵심 수단으로 정착

추진배경

- 갈등조정
- 통합관리
- 해양보전
- 경제성장
- 기후변화 대응 등

현재 60여개국 시행, 2030년 전지구 1/3에서 시행 전망

해양수산 전국포럼 충남세미나

I. 국내외 동향

해양생태계서비스 기반 공간자원 이용과 관리 : 인류 미래 생존전략으로 인식

공급/Provisioning	조절/Regulating	문화/Cultural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량 • 유전자원 • 원료물질 • 에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후 조절 • 재해 피해 저감 • 수질 정화 • 생물 조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문화 가치 • 연구 & 교육 가치 • 건강 가치 • 삼미적 가치 • 여가 & 관광

2001~2005 (남정호 외, 2016)

해양생태계 서비스의 정의
인간의 사회경제활동을 유지, 증진하는 과정에서 연안 및 해양생태계로부터 얻는 유형, 무형의 편익
Benefits people obtain from ecosystems (MA, 2005)

해양수산 전국포럼 충남세미나

I. 국내외 동향

MSP 미래 목표 : 전 세계 해양의 1/3, 2025년까지 MSP 통해 관리

해양수산 4차 산업혁명 주도, 인프라로 가능
→ 7대현 공간정보 및 공간관리 시스템 구축, 민관기반화 활용 국제화
사회적 갈등비용 감소 : 2.7~8.1조원/년
- EU 해양환경계획 수립, 1.7~13억 유로 비용절감 예측
해양공간의 최적이용, 균형적 분배
- 0원 기업자의 예측기능성, 정책집행의 비용효과성 제고
- 네덜란드 해양정책 허기비용 2/3로 감소
- 에시추세츠 주 신규케이블 설치 승인 2년 내 조기 승인

해양수산 전국포럼 충남세미나

I. 국내외 동향

해양생태계서비스 기반 공간자원 이용과 관리 : 인류 미래 생존전략으로 인식

Ecosystem Services in an Ecological-Economic System

Natural Capital: Water, CO2, Nutrients, Biomass, Ecosystem Structure, Functions, Processes, and Biodiversity

Supporting services: Cross Boundary Inflows, Investment, Management, Restoration, Natural Capital Laws & Policies, Co-producing, Experiencing, Cultural Services + Benefits, Co-producing, Managing, Regulating Services + Benefits, Co-producing, Harvesting, Production Services + Benefits, Pollution, Degradation, Waste Heat

Built, Human & Social Capital: Natural Capital Laws & Policies, Human population, WELL-BEING, Perceptions, Preferences, Financial capital, Needs & wants

VALUATION: Services / Benefits VALUATION, Economic production/A

Exports: Imported goods & services, Exports, Cross boundary outflows

(Costanza et al, 2017)

해양수산 전국포럼 충남세미나

I. 국내외 동향

'15년 유엔총회 지속가능발전목표 채택 : MDG→SDG (goal 14. 연안해양)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1 NO POVERTY, 2 ZERO HUNGER, 3 GOOD HEALTH AND WELL-BEING, 4 QUALITY EDUCATION, 5 GENDER EQUALITY, 6 CLEAN WATER AND SANITATION, 7 AFFORDABLE AND CLEAN ENERGY, 8 DECENT WORK AND ECONOMIC GROWTH, 9 INDUSTRY INNOVATION AND INFRASTRUCTURE, 10 REDUCED INEQUALITY, 11 청정에너지, 12 지속 가능한 도시와 공동체 기후변화 대응 등도 관련 목표, 13 CLIMATE ACTION, 14 LIFE BELOW WATER, 15 LIFE ON LAND, 16 PEACE, JUSTICE AND STRONG INSTITUTIONS, 17 PARTNERSHIPS FOR THE GOALS

해양수산 전국포럼 충남세미나

I. 국내외 동향

1990년대 이후 연안해양은 국가정책 레짐에 수용→ 진화 발전

육상 (~1996) → 연안 (유인도서) (1997~2002) → 무인도서 EEZ 해중 (2002~현재)

- 1962년 도시계획법
- 1972년 국토이용기법
- 1999년 연안관리법
- 2002년 국토계획법
- 2007년 무인도서관리법
- 2017년 해양공간계획법(가칭)

해양수산 전국포럼 충남세미나

II. 추진 여건

해양공간계획과 환경보전 국정과제 핵심내용으로 채택(#84)

과제목표 : 해양공간통합관리 및 해양환경에 대한 국가 관리체계 강화

주요 내용 「해양공간계획법」 제정

17년 예산
18년
19년 도약
20년
21년 완성
22년

남해안~동해안 해양공간계획 수립
해안보호구역 34개소, 지정 (27%면적, 581,260㎢) → 61개소
습지보호지역 14개소(235.8㎢)
• 해양생태계보전구역 12개소 (254.322㎢)
• 해양생물보전구역 1개소 (91.237㎢)

갯벌복원 20개소 완료

전해역 해양공간통합관리
해양공간(44만㎢) 통합관리체계 구축으로
지속 가능한 해양이용체계 확립

해양수산 전국포럼 충남세미나

II. 추진 여건

해양공간계획 추진여건

통합적 해양공간관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의 부족

- 해양이용실태, 해양환경, 생태계 조사자료는 연안해역 일부에 한정(최대 20%)
- EU는 2020년까지 관할 해역 해양생태계 평가 완료 예정(독일, 벨기에 등은 EEZ 포함 관리계획 수립)

해양공간정보 통합관리 및 활용을 위한 인프라 미 구축

- 해양공간자료는 생산기관별로 관리, 자료정보 공개 및 기관별 연계 체계 취약
- 해양공간 4차산업혁명 구현을 위한 '초연결성' 부재

부처내, 부처간 보전이용개발 수요의 조정과 통합 권한 미흡

- 다양한 이용개발 및 보전 수요의 계획적, 통합적 관리 메커니즘 취약
- 수산을 생산, 항만개발, 광물자원 개발, 바다모래 채취, 해양재생에너지 개발, 육상기인오염원관리, 환경영향평가, 하구역관리, 오염원 관리 등

지방자치단체 해양공간의 계획적, 통합적 관리 역량 부족

- 연안관리법 제정 16년 경과에도 불구하고 연안관리지역계획 수립은 62%(46개/74개지역)

해양수산 전국포럼 충남세미나

II. 추진 여건

해양보호구역 정책 추진여건

국제사회의 해양보호구역 지정요구는 높은 수준(해역면적의 10% 지정)

- 연안지역의 보호구역을 포함하더라도 EEZ의 2.3% 수준
- SDG, 생물다양성협약 아이치 타깃은 2020년까지 해역 면적의 10% 지정을 목표로 설정

해양보호구역 지정 효과성 제고를 위한 정책수단 미흡

- 효과적 보호구역 관리의 5개 기준 충족 지역 전무
 - NEOL(no-take, 법규제 집행, 10년 이상, 100km², 고립성)

해양보호구역 지정 정책의 지역성장 및 발전 정책과 연계 부족

- 지정으로 인한 경제적 기대효과가 크지 않거나 중앙정부 투자가 병행되지 않을 경우 지정에 난항
- 지역발전과 연계된 사례는 순천만 습지보호지역, 증도갯벌 습지보호지역에 한정

법정부 연안해양보호구역 통합관리 부재 및 부처간 갈등

- 해양수산부, 환경부, 문화체육관광부가 협력체계 취약
- 보호구역 선정 지정과 관련한 갈등(갯벌국립공원 vs. 갯벌 습지보호지역, 특정도서 vs. 보전무인도서 등)

해양수산 전국포럼 충남세미나

III. 추진방향

전략적 추진방향

해양국부(Ocean Well-being) 극대화를 위한 인프라 강화

- 통일 대비 통합적 해양공간관리체계 마련
 - 서해·동해·칠경해의 협력관리, 해양보호구역 네트워크, 해양공간 및 환경관리 기술협력 등
- 해양생태계 및 환경의 건강성(ocean health) 위협요소 통합적 관리
 - 육상기인오염원(하천, 대기 기인), 해양쓰레기, 유해생물, 적조, 인공해안, 매립 등
- 사회적, 경제적 지속 가능한 연안공동체를 위한 기후 및 재난 리스크 관리

정책추진과정에서 4차 산업혁명 프레임워크의 주류화

- 통합과 균형의 Ocean Governance 구축
 - 해양·항만·해운·수산·영토 등을 해양공간계획적 관점에서 조정
 - 육상중심에서 해양의 가치를 반영한 균형정책 추진(바다보존, 자원 및 에너지 개발, 하구역, 오염원관리 등)
- 기술적 개념을 넘어 사회적 개념으로 전환 : 통합과 네트워킹에 기반한 정책추진
 - 해양생태계보호와 연안자원발전, 해양수산분야 정부지원사업의 연계와 통합
 - 다층적 정책협력 및 네트워킹 : 부처간, 부처간, 지방-중앙부처, 정부-민간(지역주민), 주변국가

참여와 책임에 기초한 공유재 관리 및 해양자본 강화

- 해양계획 및 정책결정과정에서 직간접 이해관계자 참여와 책임있는 역할분담 제도화
- 지역공동체 사회자본 확충, 국제경쟁력확보를 위한 Blue Eco경제 강화

해양수산 전국포럼 충남세미나

II. 추진 여건

해양생태계 복원 정책 추진여건

갯벌복원 기술은 현재 1세대 물리적 구조 변경 중심의 기술 적용

- 연육시설, 방파제에 통수 시설 설치를 통한 수질환경 개선
- 최고 기술보유국인 미국 대비 57%수준(8.6년 격차)

중앙부처 재원에 대한 높은 의존성으로 복원지역 확장에 한계

- 제한된 중앙부처 예산으로 과거 30년 동안 허손된 갯벌 복원 수요 충족 한계
 - 복원지역 수혜당사자의 참여와 책임 미흡, 지원사업으로 인식

복원사업이 갯벌의 생태적 복원에 한정되어 지역공동체 복원에 기여 한계

- 복원사업의 궁극적 효과가 지역사회 삶의 질 향상에 기여 미흡

연안지역 공간관리 및 지역발전 사업과 연계 미흡

- 해양생태계의 건강성 증진, 자연해안 관리, 어촌증합개발, 연안정비사업 등과 계획적 연계 및 시너지 효과 창출 메커니즘 부재

해양수산 전국포럼 충남세미나

III. 추진방향

전략적 추진방향

해양거버넌스 강화 및 해양발전 사회적 협약 체결(Ocean Justice)

- 통합과 조정, 균형의 Ocean Governance를 위해 부처간 정책협약, 정부-지역주민 상생협약을 현안별, 시범사업별로 우선 세울 → 국가해양위원회 설치 검토(해양수산발전기본법 개정)
- 다층적 연결성이 기초한 포괄적 협력체계 구축으로 사회·경제·정책 혁신리더스 강화
 - 육상-해양, 시장-증양, 지역주민-시민, 남한-북한, 한반도-주변국, 남한-국제사회

해양가치 증진, 지역자본(인적, 생태적, 물적, 사회적) 중심의 지역발전, 연안재생 추진

- 고밀도 육상중심, 외부자본 의존형 연안발전, 재생체제를 해양가치(사회경제적, 생태적) 창출과 지역 중심의 Planning 및 책임 시행체제 구축 : '사람중심의 느리지만 강한 변화'

해양수산분야 연구개발(R&D)에서 Research-Development간 균형과 4차 산업혁명 기반 강화

- 임적 성장(3%→5%)과정에서 자식의 발전 소외 가능, 자식없이 해양자원 및 공간의 사회경제적 활용 불가능
- 연구개발 성과를 관리체계 혁신 : 정보·자료·자식 DB 구축, 민간개발 및 활용지원
 - 연구수행기관 및 주체의 독점적·배타적 권리와 활용 억제

해양수산 전국포럼 충남세미나

III. 추진방향

해양공간관리 중점 추진과제

- ① **先 계획 후 이용 원칙, 해양가치 우선의 원칙에 기초한 공간계획체계 시행**
 - 해양수산부내, 타부처의 이용개발에 대한 공간입지 적합성평가(환경영향, 갈등영향 등) 강화
 - 바다에 관리 권한 이양, 해양환경영향평가 독자성 확보
- ② **연안정비사업의 지역발전을 위한 통합연안재생 사업 추진 : 6개 유형별 3개소씩 우선 시행**
 - 침식방지, 휴식공간조성, 생태계 및 환경개선, 어촌증합개발, 도서민지원사업 등을 통합
 - 유형 : 고밀도 구도심(대규모), 중소도시, 저밀도 어촌, 연안육지부, 육지부-도서연계, 유무인도 연계
 - 중앙부처(해양수산부, 행정자치부) 등의 지원사업을 연계하여 계획적 통합 관리 확보
- ③ **해양계획국(가칭) 설치('18년) 및 해양공간계획관리원(가칭) 조기 운영**
 - 공간, 자원의 계획적 관리 Control Tower인 성위 전담부서 설치로 Ocean Governance강화
 - 능동적, 체계적 해양공간관리 지원을 위해 환경영향평가와 공간계획기술검토의 통합
- ④ **해양조사 EEZ로 확대/해양종합조사계획 수립('19년) 및 해양공간정보 서비스 기업 육성**
 - 영해, 특정항목에 집중된 해양법정조사의 공간범위와 항목을 확대
 - EEZ에 대한 해양생태계, 환경, 자원, 에너지, 항행, 수산, 관광, 지형 등 조사
 - 가능한 모든 해양공간자료 및 정보의 공개로 4차산업 혁명의 플랫폼 구축

해양수산 전국포럼 충남세미나

III. 추진방향

해양환경 과학적 종합적 관리 중점 추진과제

- ① **No-take 보호구역 도입 및('19년) 및 사회생태자본 기반 지역경제 거점 50개 육성('22년)**
 - 보호구역 지정과정에서 지역발전을 위한 관련사업을 연계한 관리계획 수립
 - 연안해양보호구역 통합관리 체계 구축(부처 협력)
 -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에 대한 컨설팅, 역량강화 및 창업지원(예, 증도 마을기업 '길벗')
- ② **해양생태계 종합복원 계획 수립('19년) / 유형별 1개소 시범사업 수행('19년~)**
 - 갯벌 → 암생식물 군락, 시구, 해조류, 산호, 방조제, 하구역, 인공해안 등으로 확대
 - 생태계기능 복원 → 수산물 생산성, 생태관광, 지역특산물 브랜드화, 일자리 창출 등 공동체 복원을 고려한 입체적 복원 시행
- ③ **자연해안 및 서식지 총량관리제 고도화('20년)**
 - 해양훼손 방지와 Gate Keeping으로서 총량관리제 시행
 - 매립토지 시유화 금지 인공해안 최소화, 점사용료 생태계보전현금 현실화 : 해안관리법 등에 수용
 - 2005년 참여정부 연안해양자속기능발전 8대 국정과제로 채택
- ④ **국민 해양휴양공간 조성과 지역 특화형 관광상품개발사업('18년~)**
 - 해양자원을 활용한 휴양시설 조성과 사회적 소외계층대상 복지 관광 추진
 - 지역 특성에 기반한 관광 콘텐츠 발굴과 해양관광 활성화 구역 지정

해양수산 전국포럼 충남세미나

III. 추진방향

해양생태자본 육성 및 활용 중점 추진과제

- ① **No-take 보호구역 도입 및('19년) 및 사회생태자본 기반 지역경제 거점 50개 육성('22년)**
 - 보호구역 지정과정에서 지역발전을 위한 관련사업을 연계한 관리계획 수립
 - 연안해양보호구역 통합관리 체계 구축(부처 협력)
 -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에 대한 컨설팅, 역량강화 및 창업지원(예, 증도 마을기업 '길벗')
- ② **해양생태계 종합복원 계획 수립('19년) / 유형별 1개소 시범사업 수행('19년~)**
 - 갯벌 → 암생식물 군락, 시구, 해조류, 산호, 방조제, 하구역, 인공해안 등으로 확대
 - 생태계기능 복원 → 수산물 생산성, 생태관광, 지역특산물 브랜드화, 일자리 창출 등 공동체 복원을 고려한 입체적 복원 시행
- ③ **자연해안 및 서식지 총량관리제 고도화('20년)**
 - 해양훼손 방지와 Gate Keeping으로서 총량관리제 시행
 - 매립토지 시유화 금지 인공해안 최소화, 점사용료 생태계보전현금 현실화 : 해안관리법 등에 수용
 - 2005년 참여정부 연안해양자속기능발전 8대 국정과제로 채택
- ④ **국민 해양휴양공간 조성과 지역 특화형 관광상품개발사업('18년~)**
 - 해양자원을 활용한 휴양시설 조성과 사회적 소외계층대상 복지 관광 추진
 - 지역 특성에 기반한 관광 콘텐츠 발굴과 해양관광 활성화 구역 지정

해양수산 전국포럼 충남세미나

III. 추진방향

생태적 사회적 리스크 관리(레질리언스 강화) 중점 추진과제

- ① **유해·교란생물증 추적관리 시스템 도입('20년) 및 생물다양성 보전**
 - 선박, 해류, 기후변화에 따른 해양생태계 유해, 교란생물의 영향평가 및 추적 관리
 - 데이터 베이스 구축, 최적 퇴치기술 개발, 생태계 적응능력 강화
 - 보호대상생물의 서식지 복원, 해양포유동물의 불법포획 통제
- ②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및 재해취약 지역 Setback제 도입('20년)**
 - 과학적 예측에 의한 피해방지와 피해회피 불가능 지역에 대한 안전관리 필요
 - 사후 setback : 애미 피해 후 마을 전체 setback(기제시 완연마을)
- ③ **지역사회 중심의 지속가능 마을계획 시행과 마을간 네트워킹**
 - 에너지자립, 생태자본 및 사회자본 확충을 목표로 어촌계 외 마을단위 또는 마을간 사회경제공동체 구성 및 운영, 마을 중심의 재정투자
 - 마을계획 컨설팅 지원전략 수립 및 시범사업 실행(~ '19년) 중요 거점 연안지역으로 확산('22년)
- ④ **동북아시아 환경리스크 대응 기술 개발 및 협력체계 구축**
 - 동남서해 유해생물, 적조, 기름유출, 유해물질 유출, 방선소 사고(NOAA, 후쿠시마 영향 예측) 대응 기술 개발
 - NOWPAP, YSLME 외 양자협력강화, 북한 참여 유도

해양수산 전국포럼 충남세미나

The screenshot shows a banner for 'Chungnam's Vision 1: Supporting Ecological Revitaliz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The banner features a large image of a bridge over water, with text overlaying it: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충남의 제안' (Proposed by Chungnam leading the nation), '미래의 새로운 생명공간' (New life space for the future), '연안·하구 생태복원' (Coastal and estuarine ecological restoration), and '보령호 고파도 폐염전' (Boeungho Gopado Desulfurization Project). Below the banner, there is a link to the project page: '충남도 선정, 연안·하구 생태복원 사업사업 대상지' (Designated project for coastal and estuarine ecological restoration).



